

영호남 상생 열차 '멈춤' ... 달빛철길 정부가 열어야

광주~대구 내륙철도 '경제성' 발목 ...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 안 돼
"소멸위기 지방 여건 감안해야" ... 광주·대구시 오늘 청와대 방문 건의

호남과 영남의 '마음의 벽'을 허물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영호남 상생의 큰 틀에서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달빛내륙철도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예산과 수익성을 앞세워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청와대와 정치권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의 5분 발언과 국토부 장관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22일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내 철도망 구축 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기존 3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 15개와 4차 계획 신규사업 28개 등 총 43개 신규사업을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우선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서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제외됐다. 또한, 광주시가 제안했던 광주~화순 광역

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도 탈락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은 168개, 사업비 규모는 255조 원에 달한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조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결국 경제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43개 사업 외에 달빛내륙철도 등 20여 개 사업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정해 계획 확정 전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서 제외된 광주~화순 광역철도와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도 경제성과 타당성 부족 등으로 고배를 마셨다.

달빛내륙철도가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자 광주·대구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국민의힘 김상훈(대구서) 국회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포함된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으로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정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광주와 나주 간 광역철도망이 포함됐다. 계획안은 광주 상무역~남평~혁신도시~나주역 경유 총연장 27.6km이다. 이에 따라 광주와 나주 간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주역과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경유하면서 970만명의 시민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며,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의 동맥이 될 중요한 노선이다"면서 "국토부 등 주요 정부부처는 수도권권을 제외하면 경제성을 충족하는 국가철도노선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져 이번에도 달빛내륙철도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은 수도권권을 향한 남북축이 중심이 된 기형적인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기존 노선의 선로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족은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는 29일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5월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달빛내륙철도의 철도망계획 포함을 절필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권영진 대구시장도 23일 청와대를 찾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건의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 제정 '청신호'

월말께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거쳐 이달말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희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했다.

특히 유족 등과 속의 과정을 거친 최초의 단일법안으로서 그동안 개별의원 발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가 심해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의 진통도 우려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

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재단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부칙에 담았고,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 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법과 구별된다. 사실상 제4·3특별법과 유사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이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 28일 발의됐다.

소병철 의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백신 수급 논쟁에 우려...접종 목표 달성할 것"

"상반기 1200만명 1차접종 완료" 정부, 거듭 강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두고 국내에서는 논쟁이 격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차질없이 백신 물량을 공급하고, 상반기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예정대로 완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현재 백신수급 논쟁이 합리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고 예방접종과 방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이런 논쟁에 대응하느라 역량 분산이 발생하고 있고, 전문가와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도 더 급하고 중요한 방역전략 변화 등 의제를 논의하기보다 미

래 백신 수급 논쟁에 힘을 쏟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약사가 계약을 위반해 공급을 지연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 목표한 물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6월까지 12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1단계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공급 확정된 물량이 1809만회분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급에 대해 가능성, 예측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2개월 뒤 단기 목표가 달성되는지 보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입소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다.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3만1228명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90만376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인구(5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3.66%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남개발공사
JEONNAM DEVELOPMENT CORP.

스마일 전남, 스마트 전남개발공사

도민과 함께 행복 전남을 만드는 대표 공기업

고객
체감

상생
협력

시각
중심

미래
선도

585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대표전화 061-280-0600
팩스 061-285-9859
www.jndc.co.kr